

# 전남 김·매생이 양식장, 고수온에 울고 철새 습격에 한숨

### 완도·고흥 등 겨울철 해수면 상승으로 수확량 급감·품질 저하 어민들 공기충·새충 들고 팽과리 치며 밤마다 '오리와외의 전쟁' 지나해 매생이 생산 전년비 44% 감소...양식 어가 수 매년 줄어

겨울철 전남 어민들의 주 수입원인 매생이·물김 등 해조류 수확량이 기후변화와 유해조류 탓에 격감하고 있다.

해수 온도가 높아져 수확량이 줄고 품질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리 등 철새까지 해조류를 뜯어 먹는 탓에 어민들이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매생이 양식 어가 수는 2021년 593호, 2022년 553호, 2023년 526호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남 물김 양식 어가도 2021년 3045호에서 지난해 2901호로 줄었다. 매생이는 겨울의 대표 보양식으로 지난해 1월 정부가 '이달의 수산물'로까지 선정했지만 양식어가는 줄고 있다.

양식어가가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매년 이어진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이다. 해수 온도가 상승해 양식 해조류가 폐사하거나 수확량이 줄어들어 수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기후예측센터의 해양기후정보서비스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동아시아해역(황해·동해·동중국해) 해면수온은 평년(18.6±0.4도)보다 0.9도로 높아 지난 1982년 이후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매생이 수확철인 11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측정된 완도 노화 해수온도는 최고 20도를 웃돌았으며 2022년과 2023년 역시 최고기온은 17도와 18도를 찍었다.

매생이는 8도 이하에서 잘 자라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다고 어민들은 설명한다.

실제 전남 매생이 양식 생산량은 2022년 4273t에서 2366t으로 44%가량 줄어 들었다.

물김 생산량도 2019년 47만 1347t에서 2023년 34만 4611t으로 감소했다.

배상운 매생이 생산자협회장은 "고수온이 유지되면 매생이는 자라지 못하고 녹아내리는 피해가 발생한다. 고수온에서 왕성하게 자라는 파래가 매생이를 잠식해 결국 매생이가 폐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년에 비해 매생이 생산량이 10분의 1로 줄었지만 가격은 큰 변동이 없어 어민들이 버티지 못하고 손을 털고 있다"고 말했다.

물김도 마찬가지다. 물김의 최적 성장 온도는 10도 미만이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대표적으로 붉은갯병(조균류인 붉은갯병균이 기생해 김 엽체 세포 속을 뚫고 들어가 죽이는 것)이 발생해 품질이 떨어진다.

임종섭 물김 협회장은 "전체 생산량의 30%는 매년 고수온 피해를 입어 내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어민들의 손실이 크다"며 "어민들은 불법인걸 알면서도 벌금을 내면서까지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염산처리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피해는 이뿐이 아니다. 철새가 해조류 양식장을 지나가면서 해조류 등을 먹어치워 어민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해조류를 수확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조류를 내쫓기 위해 밤새 바다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어민들은 밤새 돌아가며 배를 타고 함성을 지르면서 조류를 쫓고 있고, 일부 어민들은 거대한 부표위에 가건물을 지어 생활하면서 철새를 내쫓고 있다.



전남지역 김·매생이 양식장 곳곳에서 고수온, 철새 습격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흥군 도화면 물김 양식장 전경. <독자 제공>

완도 어민 진성식(49)씨는 "매생이 수확 철에는 오리를 쫓아내기 위해 양식장 바로 옆에 속소를 만들어서 숙식하며 지키고 있다"며 "공기충과 새충으로 소고 양동리와 팽과리를 두들겨도 큰 소리에 익숙해진 오리들이 도망가지 않아 역부족"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피해에도 어민들은 수산물재해보험을 꺼리

고 있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수온이 3일 이상 지속돼야 하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임종섭 완도 물김 협회장은 "고수온 현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와 전남도가 보상금보다 고수온에 강한 물김 종자를 연구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청소차 연료 빼돌려 본인 차에 주유한 환경미화원 2명 벌금형

### 주유소 폐업후 현금 돌려받기도

청소차에 넣을 기름을 빼돌려 자신의 차에 주유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환경미화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현)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모공단 환경미화원 A(42), B(38)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 2022년 8월까지 11차례

걸쳐 경유 1025ℓ를 사들여 일부 빼돌려 자신의 차에 주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유류카드를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경유 1705ℓ를 선결제하고 보관증을 받은 뒤 해당 주유소가 폐업하자 현금으로 250여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생활 폐기를 수집·운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예비 청소차량 관리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공단에서 청소차량 별로 배정된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로 지정 주유소에서 결제하고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을 받아 자신의 차에 주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결제시 보관증을 받은 후 기름을 빼돌리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음에도 주유 전표가 접수된 점을 수상히 여긴 공단의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기간·횟수·수법 등을 보면 위법성의 정도가 가법다고 볼 수 없다"면서 "B씨는 A씨의 제안과 권유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점,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 자치경찰위원장 재산 등록 과태료 처분 이의 제기

전남 자치경찰위원장이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47단독(부장판사 최유신) 심리로 29일 지법 103호실에서 열린 공직자 윤리법(재산등록)을 위반해 나온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사건에 조만간 전남 자치경찰위원장이 출석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7일 공직자 윤리법(재산등록)을 위반해 정부(감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불복건에 대한 소명을 했다.

그는 "지난해 재산신고 당시 가족 간 채무나 증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공

직자윤리위원회에 적발돼 과태료 900만원 처분을 받았다"면서 "신고내역 누락은 단순한 과실이고 중대한 과실에 해당 하지 않는다"며 관련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정에서 나온 조 위원장은 "재산 신고 총액을 변함 없지만, 자녀와의 전세자금 채무 등 관계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며 "단순 착오인데 공직자윤리위가 보안을 요구하지 않고 무작정 과태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총 43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담양 컨테이너서 불...대피 못한 장애인 숨져

담양의 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미쳐 대피하지 못한 60대 여성 장애인이 숨졌다.

29일 담양소방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 20분께 담양군 담양읍 한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불은 40여분만에 꺼졌으나, 컨테이너에서 A

(6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컨테이너(27㎡)와 비닐하우스 1동(70㎡)이 완전히 불타 소방서 추산 33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감식 결과 컨테이너 내 난방용 전기장판이 누전돼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하반신 마비 증세로 거동이 불편했던 탓에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컨테이너는 A씨 여동생과 조카의 소유로, A씨는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담양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남의 현금 영수증으로 세금 공제 순천시 공무원 등 7명 검찰 송치

공공시설에서 이용객이 발행하지 않은 현금 영수증을 이용해 세금을 공제받은 순천시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순천경찰은 전 순천시 공무원 A씨와 공무원 6명 등 7명을 공전자기록위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시 공공수영장, 관광지, 특산물 판매장 등을 관리하면서 이용자들이 발행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일부를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부정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총 3437건(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